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5년 12월 18일 (목) 15:00 ~ 17:33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위원) 강은희, 김 건, 김영도, 김주성,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윤건영, 이보미,
장신호, 최은옥
(총 13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13인 중 12인 출석(13인 출석 예정)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였고, 보고 및 토의 소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대통령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말씀드렸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교육위원회는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복잡한 교육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는 유능한 기구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회의에는 총 세 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하였고, 제62차 회의에서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내년 신학년도부터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종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하기 위한 案입니다. 이번 보고안건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일반국민과 교육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마련했습니다.
- 다음은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입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4년 4월 제29차 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체 활동 강화와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에서 신체활동 통합 교과인 ‘건강한 생활’ 교과를 분리·신설하고 음악·미술 교육활동을 강화한 ‘즐거운 생활’ 교과 개편을 추진하는 案입니다.
- 세 번째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기관 업무계획은 연초에 보고되는데 올해는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12월에 진행되면서 우리 위원회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서 일관된 방향을 제안하고 설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에 이번 달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을 위해서 기울이던 노력들과 향후 추진할 중점 업무 방향 등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③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보고안전)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공개
- (보고안전)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공개
- (보고안전)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 공개

④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지난 제62차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0차~제22차 회의가 정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3차례 개최가 되었고 기존에 논의되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의제를 재구조화하는 부분과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추진 일정에 대

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10차~제13차 회의가 매주 수요일 정부청사에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제13차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관련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위한 검토작업이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8차·제9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민참여위원회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 이슈페이퍼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셔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제7차 회의가 매주 월요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도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셨고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주셨습니다.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차 고등교육 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발전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 국장이 발제를 하고 관련해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우리나라의 인재상과 인재양성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제2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운영 방향과 의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제2차 회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에서도 운영 방향과 제1차·제2차 회의까지는 의

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위원회가 다 처음 발족돼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장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위촉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진행되었고 온라인과 서면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될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시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토요일에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연수 및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점검에 대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성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관련해서 대국민 공청회도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2월 11일 목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12월 12일 금요일에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관련하여 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 시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에는 국가교육위원장님과 시도 교육감님들 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12월 12일 금요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번 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사무처 측에서 이 제보자께 10월 중순에서 말경에 특위에 모시고 싶다는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쯤 후인 11월 중순에 며칠 전 국교위에서 특위 구성을 저희 본 위원회에서 같이 하자는 결정이 내려져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5일 회의를 진행했는데 본위원회에서 같이 해보자는 의견이 표출은 됐고 같이 하자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12월 3일에 해당 특위가 발족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결국 해당 사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입특위 위원장도 겸하고 계신 만큼 저는 위원장님 차원에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 (김건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해당 어떤 위원을 모시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대입특위 위원 구성을 본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 (위원장)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없었잖아요?
- (김건 위원) 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그것은 뭔가 와전된 것 같고 하나 이 경위는 있습니다. 대입 특위를 원래 예정했던 날이 있었는데 국회 상임위원 추천

이 정확하게 10월 27일인가, 추천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저서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예정되어 있던 대입 특위를 시작하지 않고 상임위원이 오시고 나면 추천을 받거나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춘 경위가 있습니다. 그 경위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늦췄는데 10월 27일이 맞습니까? 예정됐다가 안 된 날이?

- (사무처장) 제 기억으로 언론을 통해서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입 특위 진행을 조금 미뤘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그렇게 됐을 리가 없는데 뭔가 와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건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어떤 실무자에게 들었는지 밝히기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위원들과 위원장님 사이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예컨대 야당 추천위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배제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건 위원) 그리고 지금 특위 구성 관련해서도 저는 오늘 특위에서도 위원님이 오시긴 했지만 특위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대해 추후도 의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위 위원님들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단독으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처음 회의할 때 생각이 나는데 위원장님께서서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 달라, 신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특히 저 개인으로서는 위원장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신뢰, 위원과 위원장 간의 신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 것이 없고요. 지금 말씀한 케이스도 회의 마치고 나서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원의 성향을 고려해서 모시기로 했던 분을 결정을 바꿔서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성의 편향성 문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런 동기로 어떤 위원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어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아까 이런 문제가 있는 케이스라고 전제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 선정에는 오직 우리 업무를 감당할 만한 역량 위주로 했고요. 그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구성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가 매우 좋고 열의가 높고 잘 하고 계십니다. 미리 불신을 전제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방금 김 건 위원님 말씀은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⑤ 주요 내용

가. (보고안전)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 (간사)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성열관 위원장님,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조종기 단장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류방란 위원장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형미 본부장님이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참석하신 네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의제와 관련해서 정말 헌신적인 수고를 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특별한 수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전 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고교학점제 학점이수기준에 관한 사안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큰 사안입니다. 오늘 보고안전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들의 심층적인 논의를 종합한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에는 원칙 수준의 내용을 담고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부의 세부 지침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와 관련한 후속 지원사항 등은 권고사항으로 마련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권고사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확정 고시를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이후, 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착수하고, 행정예고가 종료되고 나면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교육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논의는 담당 과장의 안전 보고를 들으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자A)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6쪽입니다. 개정 요청 이후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개정진행과 개정계획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16쪽, 17쪽에 추진 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자문·검토 및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고 오늘 안건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17쪽입니다. 행정예고를 할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과정 총론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차'항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울러 부칙의 동 개정이 26학년도부터 적용·시행됨을 제시합니다.
- 18쪽입니다. 권고사항(안)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안과 함께 전문위, 모니터링단,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연구진 논의를 종합하여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후 심의·의결 시 함께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고사항의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교육부가 마련할 학점 이수 기준 지침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며,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설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반영하여 설정하되, 관련 현행 교육부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 별도 기준 제시도 필요함을 권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시 중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방식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학점 미이수 학생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도 시행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학생의 학습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도 횟수, 방식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 오늘 보고 후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하게 되고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개정 사항과 권고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 외에 전문위의 사전 검토,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 내용은 제출된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자문 내용, 시안 개발 관련 연구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육부의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교육부 지침도 참고하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러면 21 쪽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자B) 안녕하세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 성열관입니다. 아시겠지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기를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고 사회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졸업 이수 기준이 너무 강하다고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수 기준은 출석률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정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율을 반영할 수 있다고 총론에서, 행정예고의 구문은 또 본위원회에서 정해야 하지만 하여튼 저희는 사전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총론에 기술하고 괄호 2번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1안, 2안의 심의·검토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1안인 공통과목의 성취율을 반영하는 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다수가 지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 그러니까 다른 案에

대해서도 아주 소수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만 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재원은 22페이지 고교학점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저희가 심의·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대체 이수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횟수, 방식 등에 있어서 학교 자율 운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정서 위기, 경제 위기 등 실제로 학교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미이수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종합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등 지원 사항에 대해 심의·검토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다음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 (보고자C)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 조종기입니다. 저희들은 앞서 전문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 案을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여기서는 개별 단위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정 시안에 대한 워딩이랄까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서 추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안이나 2안이나 의견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특정한 案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3안으로 현행과 같이 모든 교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니터링단 현장 교원이 한 60%로서 현장 교원의 의견이 조금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주문한 것 같은데, 다만 조건을 앞서 말씀드린 권고내용과 같이 최성보지도라든지 다과목지도 등에 따른 교원의 업무 경감 내지 예산 지원 이런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고자A) 다음으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D)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방란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7회에 걸쳐서 숙의도 했고 연구센터의 자문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사실 이 특별위원회에는 본위원회의 위원이신 손덕제 위원께서도 저희의 한 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교육부 1안, 2안을 선택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설정, 성취율 설정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학교의 불만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라는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와 학교 현장에 왜곡을 넣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성취율 기준 적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온 부정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불만, 그것을 둘러싼 쟁점,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위에서는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을 취득한다는 현행 이수 기준 설정의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였고, 이수 기준으로는 출석률과 성취율 둘 다를 적시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기본원칙이나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성취율 적용은 그 적용 여부의 판단까지 포함하여 유연화해야 한다는 이 2가지 원칙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상당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고 또 성취율 기준 반영이라는 것이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학점제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 이외에도 다중 이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에게 적합하게 자기에게 맞는 경로를 찾아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학생들, 정서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책임을 학교만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분담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은 두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사실 교육부가 뒷받침돼야 할 교육부의 지원정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학점 이수의 다중 경로 제공이라든지 적절한 전문적 지원체제 구축을 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학교나 교사의 부담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교육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반드시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를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이외에도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성취율 반영을 둘러싸서는 사실 학점제가 성취평가제라는 고교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과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 적용을 포함하는 고교 내신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기일 내에 마련할 것을 전체 위원 동의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는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신 권고(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다음은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연구진 발표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E)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형미입니다. 저희 기관인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에서는 이 교육과정 시안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진이 마련한 시안 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 시안 개발의 기본방향은 교육부가 제시한 1안, 2안 학업성취율의 부분 적용과 유예(안)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현안에 대한 분석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이 과목

이수 기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 적용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크게 2가지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학교 현장의 쟁점, 우려사항 등을 분석했습니다. 교육과정 내 총론 문서는 고시문으로서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자진 개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있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 고시문에는 학점 이수 기준 설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학점 이수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고시문이 지침 설정의 근거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과 고시문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저희 시안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 이외에 이 고시문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마련하게 될 후속조치와 지원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성취율의 반영 범위입니다. 이미 앞서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된 학업성취율의 반영 범위가 공통과목의 경우에만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적용하는 案으로 저희 연구진도 제안을 했고 이 학업성취율의 반영 범위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 문서에도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론의 문서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반영 범위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학업성취율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많은 이견과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삭제할 수는 없지만 공통과목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했고 학점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 출석률만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출석일수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으로서의 출석률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졸업 기준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보완조치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출석률 반영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 이수 기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준을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의 편제 및 학점배당기준에 이미 18학점 288시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 이수 기준에 창체는 당연히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현행 교육부의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는 창체의 출석률 반영이 졸업 시점인 3학년 2학기에 3년간 이수 학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에 창체 이수과 미이수가 결정이 되면 추가 이수 기회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학년도별로 학점 이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 완화의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진급 요건, 수료 요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하여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을 위한 추가 이수 방안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보장지도와의 연계 및 통합 운영방안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최성보의 운영을 하는 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거나 학교의 여건, 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출석률만 학업 이수 인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선택과목에 대한 책임교육이 약화되는 측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현장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임교육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대입과 연계된 학교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의 후속조치 필요사항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저희 연구진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

겠습니다.

- (위원장)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덕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예.
- (손덕제 위원)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의논을 했던 1안과 2안에 대해서 함께 연구가 되고 토론이 돼서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2안이 많이 배제되고 1안으로 가는 방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현장의 의견은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최성보에 대해서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효과가 없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정책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정책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지난주 교원3단체 설문조사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최성보 효과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90.9%의 선생님들이 효과가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의 요구로 인해 교육부는 여러 의견수렴과 자문위를 통해서 국교위의 1안과 2안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올려서 전문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모니터링단 등의 검토를 거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장의 의견과 괴리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행정예고(안)도 교육부의 1안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 이에 저는 행정예고(안)과 더불어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교육과정 수립·변경(안) 1안과 2안을 함께 올려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2안 출석률을 적용시키는 案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수업일수로 해오던 그것의 연장선에서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2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권고사항으로 지금 고교

학점제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융합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인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서 도입·적용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2026년 그 이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고교 교육 특위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권고사항이 중장기적 비전으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시키며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국교위의 현장성 있는 올바른 결단이자 권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의 토론보다 학교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살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토론회도 많이 가고 또 현장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전문가 의견 또 간담회나 온라인 토론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만 가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적이고 올바른 정책도 학교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면 왜곡되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제가 교육부의 1안과 행정예고(안)을 반대하고 교육부 2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졸업 이수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에서 최성보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출석일수로 졸업이 되는 구조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졸업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안정적인 구조가 바로 2안입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안)은 졸업과 관련된 이수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결국 다양한 학습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미이수 조치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책임교육이 고교학점제의 본질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책임교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의 문제는 고

교학점제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접하게 하고 그것을 배우며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여 책임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모든 것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최성보 문제도 결국 2022년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교육의 영역은 따로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을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연계 운영되고 그 이후에 학업성취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세 번째,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등학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대학처럼 성취율의 학점 이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학년 승급이 되지 않거나 졸업이 안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민원은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업 중단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 없는 최성보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미이수되는 학생들 지난번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다 1% 미만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1% 미만의 미이수 학생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99%의 학생들의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등의 파행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행정 업무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너, 너, 너 예방지도를 받아야 돼”라고 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제가 왜요?”라는 그런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충지도를 받는 학생도 낙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방지도는 자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체크리스트를 해서 자필 사인만 하는 이런 현실이고, 왜냐하면 3월에 엄청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충지도도 3시간만 앉아 있으면 이수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학생의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예고(안)과 교육부 1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장 적합성이 낮고 그 목적인 책임교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교육부 2안의 의견에 찬성하며 권고의견으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진로·융합선택 및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 전환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은희 위원)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했었고 손덕제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교육의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보장, 기초학력진단 이런 제도가 법제화되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도 학점을 이수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물론 대학교 고등학교의 학점이 달리 해석될 부분은 있지만 학점제는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이 될 수 있는 게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때도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진로·적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게 우선 많이 홍보가 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초·중학교에서 충분한 기초학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와서 이것을 완전 책임지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올해 3월인데 저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이 학생들을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 수업과 학습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 되지 않고 무상교육으로 된 부분도 의무교육으로 완전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해서 낙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

들을 최대한 이끌어가려는 게 어찌 보면 학교라는 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학업성취율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 수준 학업이 이수되지 않은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끌어서 어떤 요일에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섬세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도 책무성이 강화되고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논란으로 지금까지도, 곧 내년 3월인데 이것을 다시 재논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면 학업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그때 도입하자?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상당부분 국교위와 관련 없는 부분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이수가 안 되었을 때 이수하는 시간도 줄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완화정책도 이미 발표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보면 이런 책무성 때문에 수업에 임하는 태도도 많이 변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장의 어려움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되풀이 논의 속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분명하게 현재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리고 손덕제 위원께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신지, 교원단체

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또 한쪽의 교원들로 아까 모니터링단을 보면 상당한 교원들이 선택과목에 대한 것조차도 책임교육을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의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논란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수많은 아이들이 1%라고 해도 이 아이들과 그 주변에 영향을 받았던 학생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본질에서 비껴난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가장 교육적인 효과와 책무성을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정리가 되어야 초·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다시 상기되면서 우리가 뭐를 더 지원하고 함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는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유민봉 위원)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 예고(안)은 17쪽에 현재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그러니까 현재는 2개를 동시에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예고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둘을 다 해도 되고 둘 중 하나를 해도 되고 또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한다는 유연성을 담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은 이 문구로 행정예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예고(안)대로 예고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가 빠르면 다음 국교위에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 예고를 하면 20일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 손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강

은희 위원님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대립된 견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니터링단,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교육과정연구센터에서 자료를 쫓고 또 저희들도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의 입장을 더 분명히 정리하고 다음번 아니면 그다음 국교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의결하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은 행정예고를 하는 이 문구에 대한 것만 이 정도면 좋겠다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그다음 단계까지 심도 있는 논의, 다시 말하면 행정예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또 접수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국교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반복되지만 행정예고(안)을 수용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보미 위원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 (강은희 위원) 예, 방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하신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권고의 형식이지만 이 권고사항까지도 사실은 세 단계를 다 거쳐서 검토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반드시 정리가 되어서 이 이행함을 전제로 해서 권고사항까지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연취현 위원) 권고사항 의결 건은 오늘 안건은 아니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행정예고가 종료되고 다시 권고(안)이 나가는 거지요.
- (위원장) 맞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런데 이 권고사항이 같이 들어가야 현장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그 절차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 번 더 요약해 주시지요.

- (사무처장) 오늘 안건은 행정예고(안)에 대한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의결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예고(안)과 권고사항(안)을 하나의 세트로 보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과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모니터링단 그리고 정책연구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행정예고(안)에 있는 교육과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권고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만 먼저 별도로 논의하고 그것이 행정예고를 거쳐서 왔을 때 권고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사실상 일체로 논의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자료로 언론에 권고사항까지도 같이, 현재 국교위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여기까지 논의된 상황은 네 기관·단체기구가 논의를 해왔는데 이 정도 논의로 일단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예측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규정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기간이 20일이거든요. 20일이 지난 시점에 교육과정과 권고(안)을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모든 것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예고(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권고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의결할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논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논의를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 (이보미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회의가 정말 이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어 오면서 그간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런 권고(안)까지 해서 행정예고가 되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정말로 현재 고1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혼란들이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그 수많은 혼란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정말 무거운 심정입니다. 오늘 교원3단체는 동시에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단체 교사노조연맹·교총·전교조 해서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보장이라는 제도로 나아가야 하지 학생들을 전례도 없는 유급을 시키면서까지 실험쥐로 만든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로 책임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학생들을 줄 세우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면서 유급해 오지 않은 국가에서 갑자기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학생들이 지금 현장 내에서 이 선택과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교실이 붕괴되어 가는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정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권고(안)과 행정예고까지 이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 교원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하는 입장에서 정말 전면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학교 현장의 혼란은 아마 앞으로 정말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사들이 아이들 책임교육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기초학력 포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원 취지와는 관련 없이 정말로 고1 학생들부터 앞으로 갈 학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이 취지와 무관한 그런 현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해 주시고 저는 이 고교학점제 이 행정예고로 출석률, 학업성취율 동시에 반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반드시 출석률로 평가하고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이 동시에 반영되면 반드시 유급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출석만으로 충분히 졸업장

을 부여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유급되는 친구들이 한 반에 나오고 같은 학년에 진급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연취현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 하시지요.
- (연취현 위원) 이보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학부모로서 계속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학업성취율을 미충족한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유급을 전제로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가?’, ‘다른 학부모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1%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아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해서 지각을 하더라도 학교만 나와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출석률만으로 선생님들이 연락하고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학업성취율이 안 되는 경우에 유급을 전제로 이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가가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유급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휴학을 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제도에서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소수이지만 과목 유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가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출석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제도에 보더라도 출석률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학습을 이수시켜서 그것을 완화하는 형태로 이 제도를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전제가 되는 학업성취율을 미충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은 전제가 이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급제도의 도입이 아니면 이것은 학업성취율을 완화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학업성취율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 고교학점제나 최성보를 유지하는 취지와 맞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출석률 기준만으로 학기를 마무리했던 친구들에게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되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선생님들이 계속 현장의 불안감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 최성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와 더불어 이 논의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늘려주는 대신 이 선택이라는 책임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 나타나는 입결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앞선 내용이 최성보 기준을 없애고 최성보 기준을 낮춰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한다면 결국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명목만 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남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히 행정예고(안)을 거수기 형태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대로 통과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권고사항을 이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또 이 권고(안)이 미시적으로 당분간 이대로 권고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의결만으로 끝낼 작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 그래서 단순히 오늘 행정예고(안)을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참고로 오늘 행정예고(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심의·의결은 행정예고가 종료된 다음에 교육과정 개정(안)과 권고(안)을 둘 다 심의·의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강은희 위원) 현장에서 학부모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학년에 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과는 공통교과이고 지금 연취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선택교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실제 한 학기 운영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전 교과로 다 하자고 했을 때 선택교과의 유·불리와 난이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면 적용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이 부담을 지금의 교원체제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한 학기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교육부에 이 부분을 개선할 대안을 요청했었던 게 시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1학년이 다루는 교과들은 공통교과입니다. 조종기 교장선생님, 우리 공통교과가 9과목인가요?

- (보고자C) 예.
- (강은희 위원) 그 7과목이 그게 기본 교과입니다. 국영수사과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한 과목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교과는 모든 교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이 좀 더 되어서 2학년으로 진급을 시키면 그다음 선택교과에서 아이들이 수업과 학습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전면적인 최소 성취율 혹은 학업성취율을 다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 1학년에 주로 다루는 공통교과에 한해서라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진급을 시키면 다른 교과를 배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공통교과만 우선 적용해 보고 추후에 일부 교사들, 아까 보니까 모니터링단의 100명 중 거의 60명 이상이 다른 선택교과도 최소 성취나 학업성취율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학생들의 학업태도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 그래서 상당한 교사들로부터 그런 책무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2학년, 3학년에 하는 선택교과에서조차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에는 교사의 여건과 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교과 수가 현재 조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차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선택에 따른 대입의 유·불리 부분들은 매우 정교하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현재 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많은 교사들이 지지했던 게 절대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국교위에서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동일 교과 안에도 학생들을 평가하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교육부에서 절대평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논의를 곧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부분이 상대평가 병기를 빼고 지금은 융합 선택만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로선택, 일반선택까지 넘어오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과 간 평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공통 교과에 한해서만 보장하는 것은 지금 제도를 진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왜냐는 1학년만 말아서 계속 최소 성취수준 보장에 대한 연장수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지원 등등 세부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했을 때 초등학교에도 아이들 유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급된 아이가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돌아오니까 유급 제도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7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때 1학년부터 2학년 올라가는데 우리가 480명인데 낙제생

이 20명쯤 됐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낙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낙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손덕제 선생님이나 이보미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교육계 전체 차원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겪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장의 어려움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구구단 못 외워도 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던 시절에서 최소 성취율로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예전에 유명한 학교에서도 다 낙제가 5% 정도씩 있었던 그 문화에서 이것을 바꾼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계에.
-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그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면서도 많이 마음이 가지만 우리는 결단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최소 성취수준 문제 이것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권고사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현장에서 이 부분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게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몇 년 거치면서 우리가 문화를 바꿔나가면 새롭게 교육의 기본 뜻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 (장신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난제입니다. 아까 손덕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호소하고 있고,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인 필요와 적성 능력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된다고

교육과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교육과정의 내용에 적극 저
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

- 학생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학생마다 미래의 꿈을 향해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잘 해야 학력을 웬만큼 유지할 하고 성취율을 높게 가져가야만 좋은 대학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꼭 수능에 매달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의 적성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 모든 학생들이 꼭 성취율을 높게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세상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성취율과 출석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너무 경직되고 너무 획일적인 방향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몰았을 때 거기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권고(안)이든 어디서든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문을 열어줘서, 학생들이 획일적인 성취기준과 획일적으로 다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줘서 학생들이 비록 성취수준이 낮더라도 공부가 아니더라도 꿈을 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필요와 적성능력으로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고1에 와서야 기초 학력과 학업성취를 학생과 선생님이 갑자기 고민하는 부분도 아

이러니입니다. 기초학력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져 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교육부에서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선생님들도 더 잘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살펴서 미리미리 기초학력과 성취율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교사 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문교사제를 도입하고 기초학력을 도와주는 선생님 수를 늘려서 미리미리 기초학력과 성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고등학교에 와서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순서가 양오봉 위원님 하시고 윤건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민봉 위원님 하시고.
- (양오봉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교학점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반대하고 또 학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안)은 그렇게 통과되더라도 교육부 지침 개정 에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기본으로 하되, 학업 성취율을 반영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여유를 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가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가고 나중에 이게 안정되고 정착되면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90% 이상 반대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끌고 갔을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 (윤건영 위원) 우선 지난번 교육감협의회 때도 그런 얘기했었습니다만 아까 교육과정 연구센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3학년 2학

기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학년제로 나눠서 하겠다는 그 제안은 바로 시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년 시행해 오고 난 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학생이 2학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2학년 때 이루어질 과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제안하는 이 내용이 1학년 때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생활기록부에 500자, 500자, 250자 줄인 거 말고는 최성보도 그 기준이 40%라는 말만 있지 시험 문제는 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우리가 제안한 이 내용은 올 1년 동안 벌어진 학교 현장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하려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 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미이수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안 된다고 원칙만 얘기했지 그 대안을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게 없거든요. 그냥 유급시켜도 된다고 하는 것을 열어놓든지,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명확한 게 없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논의하려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큼니다. 그래서 아까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점 이수 의사 중 경로를 제공한다든지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현재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 현장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얘기가 돼야 진전이 되는데, 이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첫째는 교원 정원을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장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지 다중경로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이 지침을 우리가 제안했을 때 그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떨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에서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새 부총리 오셔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결정할 때 그것이 논의가 되면 여기서 큰 방향을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고교 정원을 증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실제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 하나 속에 그것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성과가 보장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진전이 되지, 지금 하는 내용은 원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순서가 있으니까 아주 짧게만.
- (강은희 위원) 예,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1학기 때는 최소 성취수준이 안 된 학생들에게 학점당 보충하는 수업을 5시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 개선을 해서 2시간으로 줄였고 예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출석률이 안 되는 학생들 외에는 대부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마지막까지 출석률이 보장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학교 단위 책임에서 교육청 단위나 지원청 단위의 책임으로 조금 더 넘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조금 더 정교하게, 이미 발표된 案들 외에도 정교하게 더 추진을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말씀 듣고 난 후에 꼭 한 분 더 희망하시면 더 듣고, 오늘 심의·의결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행정예고에 착수하는 것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 본격적인, 오늘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사실 다음 심의·의결하는 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껴 두시고 유민봉 위원님까지 듣고 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 (유민봉 위원) 제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처음 보고할 때 그다음 62차 국교위에서도 이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보고(안)이 올라올 때까지는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행정예고(안)과 권고사항(안)이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거지요. 제가 앞에서 행정예고를 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18쪽에 보면 박스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후, 권고사항(안)도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예고는 이 앞의 것만 하는가보다 싶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말씀이 권고사항도 같이 예고된다고 이렇게,
- (위원장) 권고사항이 같이 예고되는 것 아닙니다.
- (유민봉 위원) 아십니까?
- (위원장) 예, 규정상 교육과정만 행정예고 사항입니다.
- (유민봉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권고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다른 참고자료들을 더 학습해서 다음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 본격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의 행정예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 발언 중에 강은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는데 ‘한 달 후’라는 말 때문에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행정예고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 지나면 가장 빠른 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줘

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에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줘야 준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월 15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 (유민봉 위원) 제가 한 달 후라는 것은 1월 국교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 1월 국교위에서 할 생각입니다. 김영도 위원님.
- (김영도 의원) 장시간 아주 깊은 토론이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이 내용과는 벗어난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동·청소년의 진로·적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얼마나 진로·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려주고 체험을 하게 하느냐 이것은 늦습니다. 보통 대학 갈 때 어느 학과에 갈지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가면 이과를 할지 문과를 할지, 아니면 특목고가 있고 직업계고가 있고요. 그런데 그 단계 이전에 진로·적성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특히 인문계가 아니면 직업계고라는 선택의 길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주안점이 되는 것은 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도 많이 줄고 청년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성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을 중학교 때부터 강화해서 고등학교 선택부터 학생들이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 (강은희 위원) 직업계도 다 포함된 겁니다.
- (김영도 의원) 돼 있는 것은 압니다만 주안점은 주로 인문계 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예고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고 1, 2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다중 이수 경로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문적 지원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막연한 단어로만 표현하지 말고 이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여기서 이 부분 토론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방금 보고를 하신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모니터링단, 그다음에 연구센터 등의 내용을 다 읽어보았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사단체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었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교학점제와 지금 이것이 가지는 교육철학적인 그런 문제도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심의·의결 시간에 많은 의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긴 하지만 현재 행정예고 절차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다 제가 읽어보고 제 의견도 다음 회의 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고사항에 평가방식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평가방식은 2028 대입제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한 두 달 정도를 가지고 뭔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신중치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방향이 옳다고 이렇게 선뜻 권고(안)에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현재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필요한 案을 우리 국교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권고사항(안)을 다음에 심의하겠지만 이 案이 교육부 1안이다, 2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 案의 어느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의 후속조치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교위 논의과정이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권고(안)으로 낸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의결하는

날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토론은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었고 또 오늘 토론내용은 회의록이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가는 심의·의결에서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러면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수행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는 바로 착수하고, 권고(안) 등의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때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안되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펴서 다음 회의에 잘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호 안전에 대한 배석자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 (간사) 1호 안전 배석자들은 이석해 주시고 다음으로 2호 안전 배석자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안전)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 (간사) 다음으로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 대해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정책연구진 두 분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신체활동 관련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는 세종대학교 손혁준 교수님, 예술교과 관련 ‘즐거운 생활’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경언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 (보고자A)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외에 시안 책자와 신·구 대비표 자료 총 3권을 드렸습니다. 자료집 32쪽입니다.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

육과정 수립·변경이 제안되고 '24년 4월 본 사항에 대한 개정 진행이 의결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에서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분리하여 신설하고 기존 '즐거운 생활'의 음악·미술 목표와 성취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7월에 의결되었습니다. 두 단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논의했고, 1차 연구 후에 그 추진 경과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명과 시수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2차 연구를 추진해서 시안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추진 경과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연구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며 교육과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안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전문위와 모니터링단은 자문과 사전검토의 역할을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실시했고 지난주에는 실시간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정예고(안)은 책자로 드린 자료가 해당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는 그 주요내용을 안전 자료로 요약해서 보고드립니다. 「총론」 초등 1, 2학년 편제에 '건강한 생활'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144차시로 배당을 합니다. 예술활동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은 256차시로 배당합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는 '건강한 생활' 120차시, '즐거운 생활', 200차시 시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교과 교육과정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은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이며 기존 통합교과 체계와 연계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즐거운 생활' 예술활동 경험 중심 통합교과로 개발하였고 '체험(감각적 경험)', '표현(창의적 표현)', '감상(작품 이해)' 영역으로 설정했습니다. 37쪽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은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데 유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통합교과 중에 나머지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는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이 신설되어 그 교과명을 반영하는 단순 반영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이번 개정의 적용 일정을 2028학년도 1, 2학년에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 교육과정 후속조치, 현장지원 준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권고사항은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현장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고, 국교위 의결 단계와 연구 및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전담교사 등 교원 배치,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및 여건 개선, 교원연수, 학습 자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래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도 오늘 보고 후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하게 되고 이후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안 마련을 위해 연구진과 함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와 모니터링단의 자문·검토와 의견수렴으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 위원장님 그리고 모니터링단 단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40쪽입니다.
- (보고자B) 자료집 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1년 반 전에 한국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교과로 독립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올해 과목명을 '건강한 생활'로 하고 기존에 있던 음악·미술 관련은 '즐거운 생활'로 기존 명칭을 유지하자, 그리고 시수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연구진들이 책상 위의 참고자료 1, 2, 3 이것을 만드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과 성격, 교육목표, 성취기준 등 거기에 핵심 아이디어도 있고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수·학습, 평가에 관련한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 만들어졌다고 시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의 동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시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윤문과 가독성,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신설 교과이니만큼 교원연

수 등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신체활동 전담교사, 공간 구성 등 이왕 이번에 개정이 되고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재원 사항을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C)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재구조와 관련하여 저희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원 총 200명 중 169명이 참가하여 초등학교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개정 시안, 특수교육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개정 시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셨습니다. 추가 권고 사항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원연수와 전담교사 배치, 공간 및 시설 지원, 교수·학습 평가 자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보미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보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진행 의견이 됐는데 변경 요청이 돼서 벌써 시안까지 나오고 행정예고까지 된 상황이라서 저는 궁금한 것이 이 통합교과라는 취지가 초등학교 1, 2학년 우리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통합을 하는 게 추세라서 이렇게 통합교과가 돼서 운영돼 오고 있는데 신체활동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과목을 분리해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건강한 생활’을 또 떼어낸다는 게, 요즘 세계적 추세도 범교과나 과목 간 통합을 전제로 교육과정이 발달되고 있고 지금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로 과목 간의 경계를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과목 선택도 넓히고 이런 취지로 가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렇게 통합된 것을 분절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도 지금 ‘즐거운 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체활동만 분리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미 충분히 놀이중심의 활동중심의 신체활동을 1, 2학년 학생들의 주제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전담교사 인력이 필요하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취지나 목적이 뭔지 불분명하고 약간 역행하는 취지로 이게 진행돼 온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보고자A) 예, 일단 경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도 같이 협업했던 여러 계획들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었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교육부가 국교위에 이 관련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한 것은 '24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교위에서 이 수립·변경이 필요한지 진행 여부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당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긴 보고서나 검토 결과 등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논의를 거쳐서 개정 진행이 의결이 됐고, 그다음에 개정 계획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여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 즐거운 생활의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개정 진행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 (유민봉 위원) 저도 지난번 이 논의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방금 이보미 위원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을 당시에든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분리를 수용하면서 조건을 건 것이 통합교과의 취지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신체활동 관련해서 ‘건강한 생활’을 분리하더라도 분명히 통합교과의 취지에 맞게 디자인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고서에서 ‘건강한 생활’이 어떻게 다른 통합과목과 본래의 취지를 흐뜨리지 않으면서 신체활동을 빼내는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고자A) 연구진 중에 한 분 오셨는데 말씀을 듣겠습니다.
- (보고자D) 저학년 ‘건강한 생활’ 공동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체활동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성격과 목표를 구성을 하였고 이전과는 다르게 성취기준 및 고려사항에서도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그리고 저학년의 국어교과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도 신체활동을 일반 통합 학급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만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건강한 생활’의 성격과 목표에서부터 기존 통합교과가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위한 배움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을 가장 큰 틀로 두고 그 내에서 신체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보미 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38쪽 권고사항에 ‘전담 교사 등 효과적인 교원 배치’라고 돼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원을 1, 2학년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배치하시겠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담임교사가 주로 1, 2학년의 통합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체육전담교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스포츠 강사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의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1, 2학년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교사들이 별도로 배치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과장)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체육전담교사를 의미하고, 다만 전담교사 지정은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고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체육전담교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추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보미 위원) 그러면 1, 2학년 모든 학교에 지금 체육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돼야 하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기존 초등교사가 대부분인 그런 학교 상황에서 별도로 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체육전담 시수를 늘린다는 개념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이면 음악이나 미술도 전담교사를 앞으로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과목이 다 분절돼야 한다는 의미로 비춰지거든요. 이러면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이나 적응을 돕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분절되어서 특별하게 이 과목의 취지에 맞춰서 과학전담교사가 나온 다든지 슬기로운 생활도 분리가 된 다든지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데 전체적인 통합교과의 의도와 체계가 무너지는 결정들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자B) 제가 본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이 검토 결과 보고서가 저희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괄호 치고 넣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합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저희는 심의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본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손덕제 위원님과 이보미 위원님처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래 체육하고, 작년에

거론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교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합의해 준 이유는 이 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아파트촌에 가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지를 앓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무척 많이 체육활동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너무 이렇게 선비처럼 사람들 키운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 체육이, 그러니까 음악·미술도 사실은 체육 속에 얹혀야지 자꾸 흙 묻을까 봐 실내에서만 아이들을 키우면 정서도 발달이 안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류 발달을 보게 되면 체육부터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스승 사(師)'자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 사(師)자 자체가 무술을 가르치는 글자예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체육이었어요, gymnasium이었지요. gymnasium으로 크면서 lyric을 하고 노래하고 시 배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어기는 것 아니냐고 해서 무리를 우리가 하면서도 안 되겠다. 아이들 체육을 하자라는 생각에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건강한 생활'하면 자꾸 위생 생각이 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튼튼한 생활로 하자,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생활로 다 우리말이니까 튼튼한 신체를 갖게 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고려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건강한 생활'로 다시 돌아왔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 내에 우리가 지금 문명의 흐름 속에서 아이들 성장 속에서 신체에 대한 신체성이 자꾸 사라져가는 지금 시대에 이것을 부활하려고 했었던 그 의혹을 이해해 주셔서 현장에서 새롭게 선생님들이 저게 되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어려움들은 풀어갈 수 있게 우리들이 검토를 하되 이 방향은 우리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유민봉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에 보면 순서에서 '건강한 생활'이 '즐거운 생활'보다 앞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즐거운 생활'이 더 본가였지요. 거기서 '건강한 생활'이 분가해서 나왔는데 '건강한 생활'을 '즐거운 생활'보다 앞에 놓는다는

것은 음악·미술·체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목을 배열할 때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이 순서에서 고민할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보고자A)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한 생활’하고 그 위에 3, 4학년 연결되는, 그러니까 1, 2학년의 통합교과가 있고 3, 4학년으로 이어지는 교과 배치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육, 그다음에 음악·미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고려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신호 위원님.
- (장신호 위원) 예전에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우리 토론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권고사항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교육부 과장님도 계시고 차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권고사항에 보시면 전담교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교사(교원)을 썼는데 교사(교원)은 강사와 다릅니다. 교사(교원)은 분명히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여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 강사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지금 이 ‘건강한 생활’은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될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생활’이 체육활동을 가르친다고 해서 단순히 체육기능만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만약에 준비를 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그 발달 연령대에 맞는 정서, 심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잘 보듬어서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초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중에도 지금 교대 졸업생들을 보면 임용이 다 안 돼서 각 지방에 있는 교대들에도 약 3분의 2, 절반 이상이 임용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체육 전공자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원 중에서 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부에서 특별히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건영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담교사 얘기는 이것을 신체활동 도우미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학년까지도 교과 전담을 해놓으면 이것은 통합교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다만 신체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요새 뇌과학이나 첨단과학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몸 근육에 대한 얘기는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이 제일 앞에 오는 것은 체·덕·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이 형성되면 교육부에서는 이 관련된 연수를 할 수 있는 대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15 교육과정 때 공통사회, 공통과학 나왔을 때도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현장에서 그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요새 비만이 늘어나는데 그 비만의 강도가 도시보다 시골 학생들이 더 비만 비율이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 통계에 보면 통학하는 차가 많아져서 오히려 비만 학생들이 도시보다 시골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은 최근에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일입니다.
- 다만, 35쪽에 보면 ‘내용 체계표’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신체활동 기능은 행동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기준에 있는 내용 체계 범주를 가지고 하는 게 옳은가, 이것은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취기준에서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나 일반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신체 기초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돼야지 이것을 일반적인 교육과정 기술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놓으면 본래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체계표’도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보편적인 내용 체계 분류나 범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신체

활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검토를 해서 특화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내용 체계표'에 대한 고민도 저는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이보미 위원) 방금 신체활동 도우미라는 표현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 (윤건영 위원) 그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 (이보미 위원)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 (윤건영 위원) 요새 저희들은 퇴직한 교육계 원로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할 때 꼭 한 교실에 한 분의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보조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신체활동을 하려면 야외에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나갈 때 보험도 더 들고 또 안전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 힘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보조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보고자B) 죄송한데 저희 결과 보고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이 교육과정 시안의 행정예고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검토, 이 보고서가 채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의결하실 때 제외하고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이보미 위원님 아주 짧게 발언하시겠습니까?
- (이보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시수는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보통은 왜 비만이 많아지고 신체활동이 부족하냐면 방과 후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어디 가고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요즘 아이들 사교육 때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안전이나 학교안전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담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 야외에는 자외선도 걱정되고 미세먼지도 걱

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실내 위주의 체육관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놀이 활동이나 신체활동을 많이 강조하자고 하시면서 또 말씀에는 엘리트 체육 비슷하게 신체를 강하게 키우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요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도 토론을 종료할까 합니다.
- (연취현 위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짧게 하시지요.
- (연취현 위원) 이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분리를 시켜서 시설과 학교 내의 공간 부족 문제를 확보해야 신체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는데 야외나 신체활동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다른 교과 과정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보완은 조금 더 독립시켜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보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토론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도 다음 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과정 수립·변경(안)으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부족한 부분 토론을 더 하고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최종적인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사무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석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간사) 배석자들은 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 (보고안전)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

- (간사) 다음 보고안건인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교육발전총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보도기준에 맞추어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최우선으로 자료를 미리 공유해 드렸는데 먼저 자료집 4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기구 및 조직 현황이 나와 있고 가운데 보시면 ‘25년 12월 30일 예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가 1처 6과 51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별지 자료가 안전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6년 113억 1,3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으로 ‘25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주요 보완점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50쪽입니다. 향후 업무추진방향으로 비전은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교육강국으로의 도약’을 삼았고, 목표로는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4개 추진전략과 11개 중점과제를 제안했습니다. 51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하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교육난제의 중장기적 해법 모색,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신뢰 회복, 관계기관·교육현장 협업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 52쪽입니다. 백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을 국가적 의제와 연계한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의제 논의,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소통 강화를 들었습니다. 53쪽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으로 첫 번째,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선으로 고교학점제, AI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신체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현장적합성을 최우선한 국가교육과정 선순환 체계 강화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규모 확대,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으로 대국민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방안 그리고 56쪽에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정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국교위 기능 확대 조직개편(안)이라고 한 장짜리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12월 30일 자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처 3과'였던 조직에서 '1처 6과'로 확대되고, 인원이 18명이 늘어나서 '51명'이 되고 인건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조직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루어낸 우리 기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어나는 과는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기능을 전담하는 '교육소통기획과'와 '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정정책과 외에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을 담당할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고 기존 참여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개편하여 위원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무처장님,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보고라서 내년도 일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 보고를 했는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것을 우리 본위원회에서 1년 연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 (사무처장) 제가 앞서 활동 보고할 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이나 로드맵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발전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문위원회에서도 판단을 주셨고요. 전문위원회에서도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번 회의에서 사전에 이 업무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드리고 내년 초에 연도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연도 업무보고가 먼저 진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국교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조직이 우리 법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를 가장 먼저 추진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근 전문인력 쪽으로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있을 정기 직제 때 좀 더 요청하고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교위가 공간이 부족한데 공간이 당장 마련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책상을 재배치하고 위원장실 옆에 있는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 응접실 세트를 다 치웠습니다. 집기를 다 치우고 새로 완전한 사무공간으로 재배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8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쉬운 대로 공간을 이렇게 쓰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장신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예, 하십시오.
- (장신호 위원) 새로 만들어진 과에 대해서 교육소통기획과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숙의공론화과는 무엇을 하는 데인지.
- (위원장) 참여지원과장님이 설명하지요.
- (참여지원과장) 숙의공론화과는 국민참여위원회와 국민 의견 플랫폼 기존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의견수렴을 하는 운영부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 부서는 말하자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상당히 높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 숙의공론화과를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국민적 교육에 관한 합의 이런 것을 이루는 아주 고차원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발전된 과학기술, 디지털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다각도로 숙의공론화를 구성·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숙의공론화를 하는 업무의 수준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최고 수준으로 크게 일을 부리는 수준도 있고 전문성 위주로 적게 가도 충분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숙의공론화과를 잘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나가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아주 전문성이 높은 조직이 될 것입니다.
- (김 건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그리고 대국민 업무보고 때 다 활용하셨던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그렇지요.
- (김 건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특위 중 아직 출범하지 않은 특위가 인원수까지 다 마련돼 있는 것을 보니 특위 구성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 (위원장) 민주시민교육은 저희가 23일이 100일 업무보고 날인데 22일에 발족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은 현재 적은 숫자로 출발을 하고 상임위원들이 오시면 보완해서 특위는 얼마든지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건 위원) 발족은 했는데 아직 회의는 안 하신 것입니까?
- (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발족하는 날 위촉장을 주고 첫 회의를 합니다. 제가 발족만 시키고 나가고 나면 첫 회의를, 첫 회의도 엄청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아주 의욕적이네요. 그래서 첫 회의를 하고 첫 회의 내용도 보도가 나가는데 민주시민교육은 22일에 첫 출발을 합니다.

- (손덕제 위원) 내년도 국교위 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개편에 대한 우리 플랫폼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7번의 고교 특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곳에 계셔야 실제로 전문성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살피셔야 정말로 살아 있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마땅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그 과정이 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적으로 멀리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교사단체 대표자 등 아주 정통한 분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각각 만나서 상당한 긴 시간 동안 전부 파악을 했고 그때 들은 현장의 어려움은 거의 다 사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것을 더 깊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도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는 중이고 목소리를 많이 듣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유민봉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61차 회의에서 그때 일방적인 어떤 통보를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앞으로는 위원을 위촉할 때 그 위원들에 대해 그냥 두 줄, 세 줄의 간단 경력·이력이 아니라 적어도 위촉하려는 위원들의 경력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사전에 이 자리에서라도 보고 동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특별위원회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저희들의 수용도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지요.
-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기 62차 회의록을 보면 그

위원의 위촉이 상당히 통보식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사전에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겠구나 하는 확인 또는 묵시적인 동의 이런 과정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그 한 달에 검토가 안 된다면 이메일로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20 며칠에 위원회가 하나가 출범한다면 사실은 오늘 이 회의에 그런 자료가 올라와줬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 (위원장) 그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사무처에서 생각할 때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어서 통신을 통해서 날리는 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아주 기본적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정도만 보내드리고 회의 장소에는 종이 형태로 자세한 이력을 명기해서 각 위원회 위원 전원에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 (이보미 위원)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의제를 논의할 분들을 섭외하는 것은 인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권한도 분명히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창구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이신지 정도라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다면 주변에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각기 그런 분들을 추천받으셔서 그 부분을 재고해서 저희에게 통보하셔도 그것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적합한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천 창구를 다양화해 주시고 기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그 말씀도 타당한 좋은 말씀이고요. 그에 대해서 처장님, 우리 진전된 방식으로 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데요.

- (사무처장) 지난번 회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구성할 때 인사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 드리겠다고 61차 회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62차 회의 때 제가 설명드린 바로는 특별위원회 분야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의 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추천이나 구성된 특위 위원님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사무처에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사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원들로부터도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해서 어느 정도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매우 약화되어 있어서 지난번 특별위원들도 시도교육감님들이 보시고 시도교육청에서, 이게 대부분 대학 사안도 있지만 유·초·중등 사안이 워낙 많아서 시도교육청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의뢰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인력 풀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진전된 방식을 밝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22일 발족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명단을 드릴 수는 없습니까?
- (사무처장) 예, 명단을 내일 보도자료와 함께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에 특위 이름을 정할 때 논의를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전인교육이기도 하고 인성교육이기도 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인데 관련 법률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

서 약간 정치 성향상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그 당시에 보수 측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어느 쪽에서든 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진행을 했는데 그 위원으로는 고대혁 전문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고대혁 전문위원장님은 경인교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 제가 알기로 전임 위원장께서 추천을 하셨던 분이어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성교육이 전공이시더라고요. 잠시 얘기 나눠봤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높으셔서 종합적으로 잘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위원장으로 모셨고 수락을 했습니다.

-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업무보고는 이 정도 들은 것으로 하고 방금 유민봉 위원님과 이보미 위원님 그리고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위 위촉에 대해 진전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위 위원 위촉은 위원장의 권한이다, 그렇게 개념은 잡고 있지만 그것은 무슨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모시는 것이 일을 성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안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⑥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4차 회의는 2026년 1월 15일 개최

⑦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다음은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금일 보고

드린 2건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행정예고가 20일 동안 진행돼야 합니다. 그 20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 빠른 날을 잡고자 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64차 회의를 1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 오늘 중요한 안건이 많아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2시간 30분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지혜로운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논의 주제는 1월 15일에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잘 정리하겠고 제가 다음 회의 때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 발언하신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회의록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월 15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에 큰일을 해내는 아주 효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